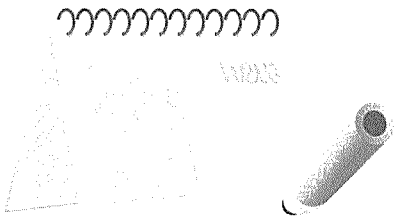


오리정보

Duck's News



정부,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21개 시군을 지정해 닭과 오리에 대해 하루 2차례씩 정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24곳에 대한 분변검사와 민통선 지역 야생 조류 일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농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대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0만명 분이 비축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인 항바이러스제제는 내년까지 100만명 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동향도 주시하면서 남북을 오가는 인원과 선박, 차량 검역을 강화하고 DMZ 철새이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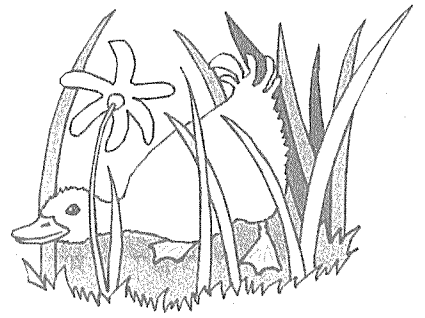
KBS뉴스

10월 중순경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농림부가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기간에 앞서

다음달 중에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방역에 돌입한다.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 중순경에는 우선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내 철새·털새



접근 차단방법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후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23일 러시아, 7월 29일 카자흐스탄, 8월 8일 몽골에서의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 대책기간중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방역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美 조류독감 백신 대량비축... 아시아 구매난 우려

미 행정부가 조류독감 백신과 항바이러스 약품들을 대거 비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위협에 직면해 있는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조류독감이 미국 내에서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 백신과 항바이러스 약품들을 비축하기 위한 총 60억~10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회와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이 계획은미 상원이 국방예산안의 일환으로 승인한 조류독감 예산안 39억 달러 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그러나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 조류독감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들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게아니냐는 우려도 낳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존

바틀렛 전염병 과장은 “조류독감은 의약품의 카트리나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9일 39억달러 규모의 조류독감 예산안을 승인했다.

보건 예산과는 관계없는 국방예산안에 부가된 이 안은 타미플루 등 조류독감에 감염됐을 때 증상을 완화하고 전염 위험을 차단하는 항바이러스 약품들의 연방 비축분을 늘리기 위해 30억8천만 달러를 할당하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예산안은 미국 내 조류독감 백신 제조를 늘리기 위해 1억2천500만달러, 아시아를 비롯한 지역에서 조류독감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3천300만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하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합)

김치유산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퇴치’

김치유산균을 이용한 천연항생·항균물질을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돼 양계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강사욱 교수팀과 셀텍인터내셔널(대표 이종대)은 최근 김치유산균을 이용한 천연항생물질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양계농가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사욱 교수팀이 개발한 천연항생물질은 김치유산균이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입증된 것은 올해 초 강사욱 교수팀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된 닭에 김치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은 사망한 반면 실험군은 대부분 회복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치유산균은 조류인플루엔자는 물론 뉴캐슬병, 기관지염 등에 감염된 닭들도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사욱 교수팀의 김치유산균을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은 4년전부터 시작됐으며 동남아 지역에서 창궐한 사스에도 한국인은 감염되지 않은 것이 김치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강사욱 교수는 “김치의 항균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치유산균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단계에 도달했으며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서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사욱 교수는 김치유산균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불과하다며 가속시험을 통해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사욱

교수팀은 셀택인터내셔널과 함께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양계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셀택인터내셔널의 이종대 대표는 “지금까지 양계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김치유산균이 함유

된 천연항생물질을 급여한 농장에서 각종 바이러스 질병은 물론 티푸스, 추백리 등 세균성 질병도 현저히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계농가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만전 기해야

인체 감염사례 작년보다 21건 증가

인도네시아의 보건당국이 지난달 숨진 일가족 3명의 사망원인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라고 지난달 20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올해 들어 아시아에서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65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21건 증가한 수치이다.

발생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베트남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중국,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도 산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이들 지역에서의 질병 관리가 아직은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병원성까지 포함할 경우 발생국가는 미국, 일본 등지까지 확산, 사실상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변국들이 모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인 셈이다.

따라서 지리적 여건상,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 및 질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이들 발생국가들과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관한 교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 수입 중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의 발생 정황을 보면 주 발생 지역인 음성 천안지역이 철새 도래지와 인접하다는 점과 철새 도래시기와 HPAI(H5N1) 발생시기의 일치, 그리고 철새 분변 검사결과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됐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불법 휴대축산물(가금육)과 해외여행객들을 통해서 전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 최대한 전 방위적인 질병관
리와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긴장의 고삐
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컨퍼런스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장 오미 시게루
박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중세
의 흑사병에 비견하며 생산·유통 등의 과
정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백

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역시 이 바이러스
의 변형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리핀 등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 조류인
플루엔자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가
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인수
공동전염병 대책위를 구성, 연말까지 70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할 계획을 세
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류인플루엔자 ‘꼼짝 마’

농림부 11월부터 특별방역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
정, 이 기간 동안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국
경 검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
에서 수입되는 모든 가금육에 대해 무작위
로 샘플을 채취, 정밀검사를 펼치고 중국과
태국 등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
육은 해당 수출 작업장별로 3회 이상 연속
검사 후 매 10회마다 재검사를 펼치는 등
검역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 방역도 강화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전국 21개 시·군이 집중 관리대
상지역으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닭·오리에
대해 매일 두차례 예찰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천수만 등 24개 지역의 철새 도래
지를 중심으로 분변검사와 오리농장·도축
장의 혈청검사는 물론 민통선지역 야생조
류 폐사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펼쳐 유
입 여부를 조기에 가려내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10월 중순쯤에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농협 등 유관기관
과 함께 농가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국에서 또 발생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 인근 창지에서 거위와 오리 128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이 가운데 63마리가 죽었다며, 중국 방역당국이 지난 2개월 사이 3번째로 발생한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키 위해 인근 농가에서 사

육하던 1,49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의 조치로 현재까지 확산 조짐이나 인체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방역당국은 지난 5월29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개인 거위 사육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질병 발생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농민신문

오리, 조류독감 ‘트로이 목마’

몸속 서 바이러스 변이 다른 동물 공격, 11~17일간 전염능력...이전보다 강력.

최근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경고된 가운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오리의 몸속에서 변이를 거듭하며 ‘트로이의 목마’ 처럼 숨어 있다가 다른 조류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미국 멤피스 소재 세인트 주드 아동연구병원의 로버트 웹스터 박사는 19일자 미국 학술원논문집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오리가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H5N1바이러스’의 트로이의 목마”라고 밝혔다.

웹스터 박사팀은 “물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였지만, 독감에 걸린 사례

가 드물었다가 지난 2001년에야 독감으로 많이 죽었다”며 “그 이후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오리에 덜 위험한 형태로 옮겨진 다음, 변이를 거듭하면서 조류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3년과 2004년에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들은 11~17일간 전염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같은 연구결과는 2002년 이전에 감염된 오리들에 비해 전염 능력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조류독감을 앓고도 살아남은 오리의 독감 바이러스를 다른 오리에 주사한 결과 독감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닭에선 독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조류독감 차단경계강화

태국 정부는 최근 조류독감 발생 사실이 공식 확인된 2개 주(州)를 '정밀관찰지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태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유콘 림랭통 태국 축산청장은 중부 수판부리주와 북부 캄팡펏주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난 1~21일 검사한 결과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콘 청장은 수판부리주의 13개 지역과 캄팡펏주의 1개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을 검사한 결과 닭들이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10만7천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殺)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20여개 주 40여곳의 가금류에서 채취한 샘플도 현재 검사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판부리주의 조류독감 감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웃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조류독감이 다시 출현함에 따라 자체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농업장관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비춰 가금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무히딘 장관은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조류독감 안전지대' 이므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사망한 30대 남성과 두 딸이 조류독감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가금류 살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대만' 조류독감 국가중대위협' 대비

대만은 현재 동남아와 중국 일대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조류독감을 '국가 안전 중대 위협'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퍼지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현재 베트남 38명, 태국 12명, 캄보디아 4명 등 사망자가 속출했으며 지난 주 인도네시아에서 사망한 일가족 3명이 인체를 통한 첫 조류독감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커 대인

전염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 관계자는 "지난 5~6월 중국 칭하이(靑海)성에서 6천여 마리의 철새가 조류독감으로 집단 폐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오는 가을 철새들이 대만으로 서식지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만에서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만 행정원은 '대규모 유행 독감 대응 계획', 위생서는 '대규모 유행 독감 방역 작전 및 준비 계획' 을 각각 마련했으

며, 지난 7일부터 국가 위생 지휘 센터의 주도로 조류독감 방역 모의 훈련도 실시 중이다. (양계연구)

러시아 'H5N1' 형 조류독감 주의보

지난달 러시아 시베리아 중부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다음달이면 모스크바 등 우랄산맥 서쪽 러시아와 유럽 지역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비상대책부가 밝혔다. 비상대책부는 '시베리아 북부에서 여름

을 나는 철새들이 가을 시작과 함께 카스피해와 흑해로 이동하면서 유럽 지역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번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H5N1' 형으로 인간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日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일본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일본 이바라키현 미쓰카이도시의 한 양계장에서 지난 4~6월 사이 약 800여마리의 닭이 폐사해 동물위생연구소의 검사 결과 일본 최초의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

출됐다고 농무성이 발표했다.

이바라키현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계장에서 생산된 닭과 달걀을 반경 5km 밖으로 이동을 제한했으며, 27일 이후 양계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2만5,000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신문)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일본 것과 달라

지난해 국내 오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지난 6월 일본에서 발생한 것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일본 가축위생시험장과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조류인

플루엔자 바이러스(H5N2)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오리에서 분리한 것과 비교한 결과, 표면유전자인 혈구응집소(HA) 유전자의 상동성이 76.3%, 뉴라미니다아제(NA) 유전자의 상동성은 8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역원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유입 방지와 철새에 의한 국가 간 전파 위험성 등 역학적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 가축위생시험장과 협정을 맺고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신문)

“농지정의에 축사 포함시켜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정의에 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정의에 축사를 포함시킬 것과 축산인들이 바라는 수준의 농지제도의 과감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축산인들이 농지의 정의에 축사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경종농업에서 우려하는 농지의 훼손이나 농업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축산업도 농업의 한부분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사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또 “현재 농지법은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농업용시설로 인정하면서 같은 농업용시설인 축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규제하고 있다”며 “농업부분에서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축산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수축산신문

축산이 농촌경제 ‘주도’

축산 생산액이 쌀 생산액을 앞질렀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4년도 농림업 총생산액 37조2천8백86억원(농업 36조1천5백55억원)중 축산 생산액이 10조8천9백99억원으로 쌀 생산액 9조9천6백31억원보다

약 1천억원 많았다.

이같은 축산업 생산액은 지난 2003년도 생산액 8조8천6백96억원보다 22.2%나 증가한 것이며, 이로써 축산업이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높아졌다.

특히 품목별 생산액에서도 5위내에 미곡, 돼지, 한·육우, 우유, 계란이 차례대로 랭크되는 등 축산의 위력을 나타냈다. 닭은 7위, 오리는 18위를 차지했다. 이중 계란은 2003년에 6위에서 5위로, 닭은 9위에서 7위로 2단계 올라섰다.

축산 품목별 생산액은 2위를 차지한 돼지의 생산액이 3조6천6백6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3위 한·육우 2조8천9백37억원, 4위 우유 1조5천1백57억원, 5위 계란 9천8

백83억원, 7위 닭 9천4백76억원, 18위 오리 4천6백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돼지 36.8%, ▲한·육우 17.5%, ▲우유 2.5%, ▲계란 16.8%, ▲닭 47.8%, ▲오리 0.9%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농림업총생산액 결과는 축산업이 그동안 농촌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은 물론, 그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축산신문 김영란

종계 데이터베이스 사업

종계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서울 서대문 소재 농협중앙회에 모인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가금산물의 수급안정은 산물의 수매비축 등 임시방편보다 종계 DB구축을 통한 수급예측과 노계도태 유도를 통해 도모돼야 한다”며 “특히 종계 DB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위원은 “DB관리의 핵심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료입력에 있다”며 “DB 초기자료 입력이 완료되기 전부터 DB의 사후관리와 농가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고 강조했다.

종계 DB구축 사업은 종계관련협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현재 263개소

종계장과 이의 육성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중이다. 양계협회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애니인포넷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해 수급위에서 지원키로 돼있는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이보균 대한양계협회 부장은 “지부 지회 점조직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 중이나 인력이나 차량면에서 물리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조병임 농림부 담당 사무관은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종계 노계의 원활한 도태를 유도하고 정확한 수급예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산란 실용계 DB구축도 병행해 산란노계의 원활한 도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 8월 16일